

‘있으나 마나’ 정차금지지대... 꼬리물기·교통체증 ‘여전’

최근 3년간 정차금지지대 240건 CCTV 단속 전환 지난해 ‘0건’ 일부 CCTV 미설치 지역서 정차

광주지역 정차금지지대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꼬리물기가 극성을 부려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정차금지지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4항에 따라 상습 교통혼잡 교차로에 30cm 폭의 황색 사각 실선을 칠한 곳으로 적색 신호 시 차량 진입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다.

경찰은 단속카메라 증가로 현장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 안전의 위협을 막기 위해선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정차금지지대 꼬리물기 단속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235건으로 가파른 증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단 한 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단속이 현장에서 CCTV 단속으로 전환된 사이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꼬리물기의 경우 끼어들기, 갓길통행과 함께

3대 압제운전으로 불리며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동구청 앞 편도 2차선 도로 정차금지지대의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일반 차량은 물론 시내버스도 정차금지지대를 침범해 구경을 출몰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차로 인근 1개 차선의 심각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인근 장동교차로에서도 꼬리물기가 지속돼 위태로운 차량 운행이 빈번하게 포착됐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교차로에서 차량 혼잡으로 신호가 바뀌어 지나가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앞 차량에 붙어 반대 차선을 막는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명백히 규정된 교차로 통행 위반 행위다.

꼬리물기 단속의 경우 비디오(CCTV) 단속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 적발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광주지역에서 단속 카메라가 대폭 증설되면서 경찰관의 현장 직접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이 늘어나면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시민의 날 물놀이장 개장 제60회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24일 광주시청앞 차없는 거리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60회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24일 광주시청앞 차없는 거리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60회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24일 광주시청앞 차없는 거리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단속 카메라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꼬리물기가 기승을 부리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500여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교차로 꼬리물기(신호위반) 단속을 전담하고 있다”며 “광주 서구 서창사거리처럼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교차로 신호위반이 현저히 줄었다”고 강조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광주 도심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정차금지대 위반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소통 원화에 중점을 두고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소송 승소

5·18 당시 발표명령 거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표 명령을 거부하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표 명령을 거부했다.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받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 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고,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의원 면직이 불법 구급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다.

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

다고 보고 일시금을 2,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안 치안감의 퇴직일은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적용할 경우 1981년 6월 30일이고, 연령정년을 적용하면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이다.

연령정년 기준 나이인 만 61세가 되기 전 숨진 경우 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

이에 전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공소기각 판결 정준호 의원 “재기소 절차적 위법”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3개월여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사건을 재기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재기소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

자의 신청에 따라 현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현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현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증인 신문 등 다른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7월 21일로 예정됐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까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들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검찰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공소를 무효로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이 경우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하거나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는 대신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건을 재기소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 정 의원을 재기소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경찰청, 대선후보 벽보·현수막 훼손 10명 검거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시민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해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 곳곳에 게시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절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환준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